

박순애, 논문 투고금지 의혹 등 반박

교육부 "당사자 명예 심각히 훼손...유감" "논문은 자진 철회한 것...연구윤리 준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가 사교육 업체에서 대입 학교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 부총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해당 학술지는 당시 공고에서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그가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가 취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공고했다.

MBC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토 정책을 다른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부총리는)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박 부총리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두 아들 중 한 명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며 "다른 한 명은 재수를 해 지방의대에 정시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함께 보도했다.

이에 교육부 최성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박 부총리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관련성이 있다면 교육부도 (법적 조치 여부) 검토를 같이 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밤 늦게 보도 반박 자료를 내고 논문에 대해서는 "박 부총리가 IRPA 게재 당시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박사



채용 과정에서는 논문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으며 해당 연구원이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투고금지는 모든 학술지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학술지별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IRPA는 부총리가 논문을 자진 철회했기에 그로 인해 투고금지 처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 자녀들의 컨설팅 의혹에 대해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으로,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입시비리조사 전담 부서' 운영에 차질이 없겠냐는 말에 최 대변인은 "부총리 자녀가 20만 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는 크게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그 부분(국정과제)은 집행하는 데 염려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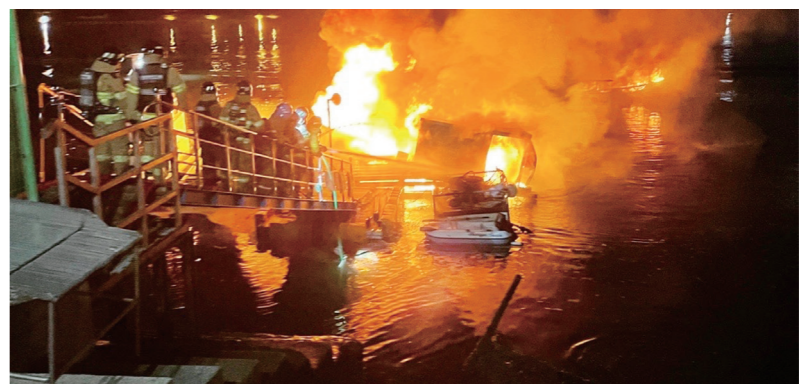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22년도 민·관 합동 방제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13일 완도군 신지도 인근 해상에서 기름 유출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선박화재 화재안전조치 안내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연속하여 발생한 제주 어선화재와 관련하여 광양시 선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치에 나선다고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 15일 무안군 현경면에 위치한 홀통해수욕장 및 해변에서 수난사고를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동부소방,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명돈)는 지난 11일~13일 3일간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수난 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강진경찰,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실시

강진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이틀간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총 24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대처요령'과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순천경찰,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일당 검거

순천경찰은 미국 유향 생활 중 투약한 'LSD' 및 '액상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밀반입한 'LSD' 및 '액상대마'를 판매한 판매책, 이를 매수하여 투약·흡입한 투약자 등 총 11명 검거 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장마철 인명피해 없게...위험지역 119곳 민관 긴급점검

18~22일 닷새간...미흡사항 발견땐 8월 초까지 보완

행정안전부는 오는 18~22일 닷새간 장마철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의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일환이다. 점검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 피해지역과 급경사지,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댐, 하천 등 119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재해우려지역 5602곳 중 최근 피해가 발생한 곳을 표본으로 뽑았다. 단, 점검 기간 중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다.

방재시설의 이상 유무와 주민대피계획 수립여부, 유역(강·하천) 단위 수위·강우 모니터링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마을 이상 등 지역 주민을 참여시킨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각 시·도별 조치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초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보완하고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세종대왕님 세척해드릴게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관계자가 세종대왕상을 세척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동상 세척은 지난 2020년 4월 세척 이후 2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추가 조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 제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트 대표를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와 관련해 "수감되어 있어 조사 시간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 대표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접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 속여 수백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 대표를 상대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서면답변을 요청한 지 약 두 달만에 김 여사 측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내용을 검토 중인 경찰은 추가 답변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전남선관위, 허위학력 기재혐의 기초의원 고발

벽보·공보물에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 기재

전남선관위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 목적을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이며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

재·공표한 혐의다. 동문회에는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 내포돼 있음에도 A씨가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 기재한 것은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경력 등에 허위 사실을 공

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